

(1)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

□ (개념) 국가 R&D 참여기업은 출연금(총액기준)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.
다만, 중기부 과제는 출연금 규모를 고려하여 4억원으로 조정

○ (기대효과) 연간 총 2,630명의 청년(15~34세)인력 신규채용 기대

* 예) 기업이 연간 5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청년 3명 의무 채용

□ 주요내용

○ (대상 기업) 주관 과제 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5억원 이상의 정부 R&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

*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(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)
단,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,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총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

○ (채용조건) 연구직, 과제 참여 필수

○ (신규채용 기준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에 신규 채용한 자

* 동일 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(참여율 100%만 인정)
단,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%씩 동시 채용은 가능

○ (의무채용 시점)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, 부처·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* 가능

*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

(예시)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(3년간 지원)

구 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
정부 출연금	3억원	3억원	4억원
의무채용	1명	1명	0명

*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협약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화

○ (고용유지 기간) 최소 1년 이상 또는 과제 기간의 1/2 이상

* 부처에서 과제 특성에 맞게 결정

○ 적용 제외사업 :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, 부처에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제외할 사업 판단

* (예시)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등

□ 이행방안

○ (신규과제 선정) 과제 공고시에 '청년채용 의무화' 명시하고, 협약시에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 포함

*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기업이 전문기관에 제출

○ (중간점검) 연구비관리시스템(이지바로 등)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

○ (위반시)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,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(既 지급 인건비 포함)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

□ (시행시점) 각 부처 관련 규정 개정* 후 선정되는 신규과제**부터 적용

○ 제도 시행기간 : 한시적 적용(2022년)

* 총리실 규제심사 필요('18 상반기 개정 목표 추진)

** '18년 하반기 신규 공모과제가 없는 경우 '19년 상반기 신규 공모과제부터 적용

[2]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

- (개념) 중소·중견기업이 정부R&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, 정부납부기술료*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*의 50% 만큼을 감면

* 과제 종료 후 '성공' 판정 시 지원금액의 10%~20%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
(연간 약 2,000억원)

- (기대효과) 연간 총 2,230명의 청년인력 신규고용 기대

□ 주요내용

- (채용 조건) 정부 R&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
- (고용 유지) 2년 이상 고용 유지
- (신규채용 기준)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성과급 포함
 - *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,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

□ 이행방안

【연구과제 종료 후】

- 전문기관-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*
 - *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

○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

*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,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

【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】

○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

○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(고용인력 2년치 연봉의 50%) 최종 결정 통보

-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시
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

- 단,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
없이 전액 납부

□ **【시행시점】** 각 부처 기술료 관련 규정 개정('18 상반기 목표) 이후 기술
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(기존 계속과제 중 종료과제)부터 적용

○ (제도 성과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)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SMS
등의 방법으로 과제 이행 중인 기업에 관련 내용 공지 및 참여 독려

* (예시) KOSBIR 280여개 지정 사업에 참여하는 27만개 중소기업 중 계속
지원 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풍부

[3] R&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

- (개념)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시 기업의 R&D 매칭 부담*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

* (중소기업 기준 정부 R&D 참여기업 매칭 부담) 총 연구비의 25% 이상을 매칭하여야 하며, 매칭 금액 중 20~40%는 현금으로 부담

- (기대효과) 연간 총 2,036명의 청년인력 신규고용 기대

□ 주요내용

- (채용조건) 연구직, 과제 참여 필수

- (적용 대상)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

*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

- 신규채용 기준

- (신규과제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

- (계속과제) '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로 하고, '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
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성과급 포함

*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,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

- (현금부담 금액 범위) 신규 인력 고용 유지시 계속 감면

* '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'19년에도 계속 고용시 '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 만큼 감면(과기정통부 제도 시행 중)

※ 기업 현금부담 감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(좀비 기업 양산, 도덕적 해이 등)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필요

□ 이행방안

- (신규과제 선정) 과제 공고시에 동 사항을 명시하고, (연차)협약시에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 포함
 - * ‘출연금 비례 청년채용 의무화’ 과제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, 연구과제 계획서에 동과제 신규 고용인력을 ‘채용 의무’과제 신규 고용인력과 구분 기재
-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시까지 신규 청년 인력을 채용해야 함
- 현금부담금 납부 유예 및 납부 시점 관련..
 - * 현금부담금 감면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 함

【신규과제】

- (1차 회계연도) 현금 부담금 납부를 회계연도 종료까지 유예하고, 회계연도 동안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한 현금부담액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
 - * 기업은 신규 인력 고용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
- (2차 회계연도~) 전년도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 하거나 당해연도에 신규 채용하는 경우, 당해연도 해당 인력의 인건비 만큼 감면한 현금부담액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
 - * 다만, 마지막 회계연도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현금부담금 납부

【계속과제】

- 연차협약시 청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인(6개월 이내, 기업이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) 후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금 부담금 감면

□ 【시행시점】 각 부처 현금부담금 감면 관련 규정 개정(‘18.4월 목표) 이후 계속과제부터 적용(필요시 협약변경)

- (제도 성과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)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SMS 등의 방법으로 과제 이행 중인 기업에 관련 내용 공지 및 참여 독려